

8월 전북 주택시장, 안정적 흐름 유지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서... 전월대비 소폭 매매·전세 가격 상승세

지난달 전북 주택시장은 전월 대비 소폭의 매매·전세 가격 상승세를 보이며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자료에 따르면, 전북 주택 종합 매매가격지수는 0.07% 상승, 전세 가격지수는 0.16%로 상승하며, 전국 평균과 비교했을 때 지방권 상승세를 견인하는 지역 중 하나로 분석된다.

전북의 주택 매매시장은 아파트와 단독주택, 연립주택 모두 소폭 상승하며 안정세를 이어갔다. 아파트 매매가 격지수는 0.11% 상승, 단독주택은 0.01% 상승, 연립주택은 0.09% 상승했다.

이는 전주와 군산 등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정주여건이 양호한 단지에

서 매수 문의가 꾸준히 이어진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전주시는 최근 정비사업과 신축 단지 공급 소식으로 일부 단지에서 매매가 상승폭이 다소 확대됐다.

전북 지역은 수도권이나 일부 광역시와 달리 급등세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장기적 관망세 속에서 안정적인 가격 형성을 보이고 있어 실수요 중심의 매수 수요가 유지되는 상황이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전북은 대체로 외곽지역이나 노후 단지에서는 거래가 부진하지만, 전주 등 중심지의 신축·역세권 단지에서는 매수 문의가 지속되고 있다”며 지역 내 혼조세 속에서도 안정적 흐름이 이어지고 있음을 강조했다.

전북의 전세시장 역시 안정세를 보였다. 전세가격지수는 0.01% 상승하며

전국 지방 평균(0.00%) 대비 소폭 상승했다. 아파트 전세는 0.04%, 단독주택은 -0.02%, 연립주택은 -0.10%로 나타나 유령별 차별화가 일부 관찰됐다.

특히 전주 지역은 학군과 생활 인프라가 갖춰진 단지를 중심으로 전세 매물이 부족해지면서 가격 상승 요인이 일부 나타났다. 반면 군산과 익산 일부 지역은 공급물량과 임대 수요 간 균형이 유지되며 큰 변동 없이 보합세를 보였다.

최근 전북 전세시장은 수도권이나 서울과 비교해 급격한 상승이나 하락이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지역 내 인구 유입과 주택 수요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북 전세시장은 선호지역 중심으로 가격 차별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대규모 신규 공급이

없는 한 안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월세시장에서는 전북이 지방 평균 상승률을 상회하며 눈에 띄는 움직임을 보였다. 월세가격지수는 0.18% 상승했고, 아파트 월세는 0.18%, 단독주택은 0.01%, 연립주택은 0.08% 상승했다.

이는 전주지역 중심으로 월세 수요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특히 직장인과 교육 여건이 양호한 지역에서는 임차인의 선호가 높아 월세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전북 월세시장은 실거주 수요 중심으로 가격이 결정되고 있으며, 전세 수요 일부가 월세 전환으로 이어지는 현상이 관찰된다. 특히 전주를 중심으로 한 양호한 정주 여건 단지가 월세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상근 기자



2025 대한민국 지식대상 에서 지식경영 부문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전기안전공사 ‘대한민국 지식대상’

지식경영 부문 행안부 장관상 수상

한국전기안전공사가 다시 한번 빛나는 성과를 거뒀다.

공사는 지난 11일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2025 대한민국 지식대상’에서 지식경영 부문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지식대상’은 행정안전부와 매일경제가 공동 주관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지식행정·경영 분야 포상이다. 올해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 총 20개 기관이 수상 명단에 올랐으며, 전북혁신도시에 본사를 둔 한국전기안전공사도 당당히 이름을 올려 지역의 자긍심을 높였다.

특히 전기안전공사는 세계 최초로 AI·IoT 기술을 접목한 BSS(에

너지저장장치) 안전관리 플랫폼을 구축, 재생에너지 전환 시대의 안전을 보장하는 ‘계임체인저’로 평가받았다. 이와 함께 축적된 BSS 안전 빅데이터를 삼성SDI, LG에너지솔루션, SK온 등 국내 대표 배터리 3사와 공유하며 글로벌 협력 체계를 형성했다.

이를 통해 BSS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K-배터리 산업 활성화와 국가경제 경쟁력 강화에도 큰 발걸음을 내디뎠다는 평가다. 남하영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은 “이번 수상은 공사가 꾸준히 추진해온 디지털 기반 안전관리 혁신의 값진 결실”이라고 강조했다.

/오상근기자

농협사료 군산바이오,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적합’ 판정

농협사료 군산바이오(장장 정민석)가 최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 연장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 향후 3년간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하게 됐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연장심사는 최초 인증 후 3년마다 실시되는 공식 절차로, 사업장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를 엄격히 점검한다.

군산바이오는 지난 3년간 꾸준히 안전보건경영체계 강화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이번 심사에서도 △자기관리 예방체계 구축 △근로자 참여와 정보 공유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 이행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인증 기준을 충족했다.

정민석 장장은 “근로자의 생명 보호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왔다”며, “앞으로도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해 안전하고 활기찬 군산바이어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오상근 기자

치유농업, 발달장애인 직업교육의 새 길 열다

농진청, 맞춤형 교육 자원 개발... 손기능·대면 능력 크게 향상

농업이 단순한 생계수단을 넘어 치유와 교육의 장으로 확장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최근 발달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기 위한 치유농업 기반 교육 자원 ‘식물 재배 관리·꺾꽂이 활동’을 개발하고, 특수학교 현장 연구를 통해 그 효과를 입증했다고 밝혔다.

발달장애인은 기본적인 돌봄뿐만 아니라 자립을 위한 직업훈련과 사회 적응 지원이 절실하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지난 2023년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센터에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한 데 이어, 이번에는 학교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직업재활 교육 자원을 내놓았다.

연구진이 전국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3곳(5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험 결과, 치유농업 프로그램에 참여한 집단은 기존 직업교육을 받은 집단보다 손기능·물체 조작 능력이 27.2%, 신체 협응성이 9% 향상되는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인쇄나 사무 중심 교육에 비해 농업 활동이 발달장애인의 신체적·인지적 발달에 훨씬 효과적임을 보여준다.

이번 교육 자원은 16주 과정으로 설계됐으며, △치유농업 이론 수업 40분 △체소·허브 심기와 수확 등 실습 40분으로 매주 80분간 진행된다. 단순히 식물 관리에 그치지 않고,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을 보조하는 서비스 업



무 교육까지 포함해 실제 직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교육은 학생 개별 특성에 맞춰 대면 서비스 업무(고객 응대, 예약 관리)와 비대면 식물 재배 관리로 구분돼 진행된다. 이는 발달장애인의 강점을 살려 맞춤형 직업 역량을 기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오상근 기자

중소기업계 “노동안전 종합대책, 예방 중심 지원 강화돼야”

“정부 발표에 공감... 과도한 제제는 현장 혼란 우려”

정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대해 중소기업계가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도, 일부 제재 중심 대책에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성명을 통해 “산업재해 감축을 위한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며 “특히 소규모 사업장 시설 지원, 산재예방 활동 인센티브 확대 등

그동안 중소기업계가 요구해 온 내용이 반영된 점은 안전한 일터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중앙회는 “산재 예방 역량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한 점검 후 즉각적인 처벌과 경제적 제재, 작업중지 요건 완화 등은 현장의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과도한 엄벌주의는 생산 차질, 납기 지연, 수출 경쟁력 약

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산재공화국의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노사가 함께 ‘예방’에 집중해야 한다”며 “사업주 책임만을 강조하기보다는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와 정부의 실질적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는 “정부가 후속 법제화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중소기업 10곳 중 9곳 “국내인력 구하기 힘들어”

중기중앙회... 주 4.5일제 도입 시 납기 차질·비용부담 우려

국내 중소기업 대다수가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유지하거나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력난이 심화되는 가운데, 주 4.5일제 도입 시 생산 차질과 비용 증가에 대한 우려도 큰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외국인근로자를 활용 중인 중소기업 508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주 의견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50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7월 2주간 진행됐다.

조사에 따르면, 전체의 98.8%가 “국내근로자 채용이 어려워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인건비 절감을 이유로 뽑은 기업은 2.6%에 불과해, 외국인 근로자가 단순한 비용절감 수단이 아니라 구조적 인력난 해결책임을 다시 확인시켰다.

또한 응답 기업의 98.2%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현 수준 유지”(80%)

하거나 “확대”(38.2%)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확대 시 평균 채용 인원은 6.5명으로 나타났다. 향후 3년간 고용허가제 수요 전망도 “증가”가 55.5%에 달한 반면, “감소”는 2.8%에 불과해, 외국인 근로자 수요는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선호 국적은 응답 기업의 60.8%가 “기존 근로자와 동일 국적”을 선택했다. 이는 관리 효율성을 높이려는 경영 판단으로 풀이된다. 기타 이유로는 성실성과 인성(8.7%)이 꼽혔다.

한편,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K-point E-7-4 비자 제도와 관련해 기업들은 한국어능력시험 및 사회통합프로그램 인프라 부족(27.4%), 제반 행정비용 부담(20.8%), 복잡한 행정절차(12.5%) 등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제시했다.

또한 주 4.5일제 도입 시 예상되는 영향을 묻는 질문에 기업의 42.1%는 “납기 준수 어려움”, 24.1%는 “인건비 부담 및 비용 상승”을 우려했다.

/오상근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